

불 붙은 '역사전쟁'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진보연대·전교조 전남지부·전남교육희망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8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8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시민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개최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교육계 원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대한민국 수호 차원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車 100만대 기지' 마지막 기회 광주 정치권, 국비확보 총력전

윤장현 시장·심판구 與 시장위원장 상경...국회 지원 호소

광주시가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비 확보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광주시는 물론 새누리당 광주시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 심판구 광주시당위원장과 함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 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윤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해외 투자에 주력하는 완성차 업계의 국내 투자를 끌어내려 정부와 정치권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심 위원장은 "광주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한 뒤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관계자

들과의 면담은 윤 시장이 새누리당 광주시당에 협조를 요청해 이뤄졌다. 이는 윤 시장이 소속 정당은 아니지만, 여당의 도움 없인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간절함이 배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나도 광주에 내려가 여러 차례 말을 했다. 최선을 다해 돕겠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빨리 끝나도록 기획재정부와 잘 협의하라"고 말했다고 시는 전했다.

김재경 위원장은 "정부안에 안 들어간 내용이지만 예타가 끝나면 국회에서 증액해야 할 사업으로 예타가 통과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상임위 등 국회에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광주형 일자리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으니 꼭 성공시켜달라"고 주문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현재 62만대에서 100만대를 넘어야 불류 때문에 기업 이전이 가능하고, 고용 등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했다. 김정은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도 이 사업을 잘 알고 있더라. 적극 돕겠다"고 거듭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노벨문학상 벨라루스 여성 작가 알렉시예비치

대표작 '체르노빌의 목소리'

올해 노벨문학상은 벨라루스의 여성 작가 알렉시예비치(67)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로 유명한 알렉시예비치를 선정했다.

러인 출신의 알렉시예비치는 벨라루스 국립 대학교 언론학과를 졸업하고 여러 지역 신문사와 문학예술잡지 기자

로 일했다. 그녀는 구 소련 시절부터 반(反) 체제 성향의 작품을 써왔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의 후유증을 다룬 다큐멘터리 산문 '체르노빌의 목소리'는 우리나라에도 번역 출간됐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흥재의 세상만사 ▶2면

의료쇼핑 부추기는 의료급여 ▶6면

新 팔도유람-대전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정부, 12일께 국정화 전환 여부 발표

여·야 충돌 넘어 진보·보수 '이념 전면전' 비화
 광주·전남 교육·시민단체들 반대 성명 잇따라



일각에서 '좌편향' 비판을 받고 있는 금성출판사, 미래엔, 천재교육, 지학사, 두산동아, 비상교육이 펴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하지만 현행 교과서에는 교육부가 2013년 내린 수정명령이 모두 반영됐다. /연합뉴스

색하는 대신, 국정화만 부르짖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팽배하다.

새누리당 등은 현행 검·인정 교과서를 '반(反)대한민국 교과서', '좌파 교과서' 등으로 규정하면서 대안이나 개선안을 모색하는 대신, 국정화만 부르짖고 있다는 의견도 많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서 '현행 중·고교 국사 교과서는 국가관을 부정한다'는 강경 발언을 하며 국정화에 대한 당력을 쏟아냈고 있다.

"다양성을 해치고 정권이 원하는 사실만 역사적 사실로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출발했다"는 국정화 반대 의견에 대한 수렴을 거치거나 갈등 해소 절차도 없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한국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각계의 반대 목소리와 불신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별다른 갈등 해소나 공경·신뢰 확보 과정 없이 '국정화 강행'이라는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적지 않다.

정부가 '역사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도, 소통이나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 대신, 국정화 강행 입장을 정치권 등을 통해 흘려 '이념 논쟁'을 부추기는 등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광주·전남 교육현장, 시민단체 등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당장, 현장에서 학생들이 가르치는 광주지역 역사교사들부터 반대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광주지역

67개 고등학교 역사 교사와 90여개 중학교 역사 교사들은 오는 1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한국사 국정화 관련, 전문가 초청 연수'를 진행한 뒤 곧바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이미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남교육희망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8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유신 독재 시대인 4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며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국정화를 밀어붙인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해 정부의 불순한 의도를 저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놓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교과서 교과서 파동때 결성된 '역사왜곡 교과서 퇴출 광주시민대책위원회'와 연계, 강경 대응하는 방안을 조율중이다.

앞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헌법은 물론 34명의 서울대학교 역사학 전공 교수뿐만 아니라 전국의 역사학자, 2300여 중등학교 역사교사도 반대하는 등 민의(民意)에 반하고, 민주주의 가치, 자율성·다원성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언론에 게재한 바 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내느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전국 46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도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Mercedes-Benz